

**환경부
보도자료**

2005년 11월 5일(토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

- '05. 10.31 배포
- 사진 없음
- 총 12쪽

대기보전국 대기총량제도과	박광석 과장 김영민 사무관	전화 (메일)	02-2110-7928 cusco92@me.go.kr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2.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」 확정

- 향후 10년 내 선진국 수준의 대기환경 달성 -

- ◇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10년간 수도권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최초의 범정부적 종합계획 확정
- ◇ 지역배출허용총량제 도입, 무저공해 자동차 보급 및 운행 중인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추진

- 정부는 11. 4(금) 15:00에 정부중앙청사 9층 회의실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,
 - 수도권 대기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·장기 종합대책인 「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」을 최종 확정하였다.

《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》

-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등 주요사항을 심의·조정
-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및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장 등을 위원으로 하여 총10명으로 구성
 - ※ 재정경제부·산업자원부·환경부·건설교통부·기획예산처장관, 국무조정실장, 서울특별시장, 인천광역시장, 경기도지사

-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은 '03년말 제정된 「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에 근거하여 10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서,
 - 이번 기본계획은 법제정후 최초로 수립되는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기환경개선대책이다.

-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「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2014년까지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의 오염도를 주요 선진국 수준 (파리, 동경)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
 - 3개 시·도에 지역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시·도에서는 허용총량을 준수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하여 추진
 - ※ 오염물질별로 기준 연도(2001년) 대비 38~53% 삭감
 -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
 - 제작차에 대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,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 보급,
 - 운행중인 경유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 기준 미준수 차량에 배출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의무부여
 - 환경친화적인 교통수요 관리방안으로 대기오염이 심한지역을 환경 지역(Environmental Zone)으로 지정하여 오염물질이 많은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교통혼잡통행료 부과대상을 확대하여 차량의 통행 감소 유도

○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

-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총량제 및 배출권 거래제 실시
- 수도권외 모든 주유소에 단계적으로 주유과정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(VOC)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 설치 의무화
-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방지시설 설치비 등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

○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및 도시관리를 위해,

- 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큰 집단에너지 보급 및 친환경 건축물 지정 확대
- 오염물질의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바람통로를 활용한 도시관리 계획 수립 추진

□ 동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향후 10년간 총 4조 7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

○ 제도개선을 우선추진하고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분야에 한하여 재원을 투자하고

-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기준강화에 필요한 비용은 민간이 부담하도록 하고, 부담능력이 부족한 계층에 한해 지원하기로 하는 등 합리적인 재원투자원칙을 수립하였으며,
- 주기적으로 재정투자에 대한 평가를 통해 투자의 적정성 및 우선 순위를 조정하기로 하였다.

○ 특히,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일부를 차량 소유자에게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

- 이로 인해 차종별로 차량 소유자는 10만원~35만원 정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,
- 정부에서는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, 정밀검사 면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.

□ 환경부는 “동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수도권 대기환경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될 것”이라고 내다보고 있다.

〈참고자료〉

붙임 :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(안) 주요내용

<붙임>

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(안) 주요 내용

가. 개요

- 계획기간 : 10개년('05~'14)
- 대기관리권역 :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4개 市
- 대기환경개선 목표
 - 미세먼지(PM₁₀)와 이산화질소(NO₂) 오염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
 - 맑은 날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시정 확보

오염물질	2003	2007	2009	2011	2014
미세먼지($\mu\text{g}/\text{m}^3$)	69	60	55	50	40(동경수준)
이산화질소(ppb)	38	35	32	28	22(파리수준)

- 관리대상 오염물질 : 미세먼지(PM₁₀), 질소산화물(NO_x), 휘발성유기화합물(VOCs), 황산화물(SO_x) 등 4개 물질

나. 지역배출허용총량관리제 도입

- 기본개념
 - 대기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용량을 산정하고, 그 범위 내에서 자동차 및 사업장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

□ 시행체제

- 수도권 전체 배출허용총량을 시·도별 배출량 비율에 따라 지역별로 할당(오염물질별로 기준 년도 대비 38~53% 삭감 필요)
- 시·도에서는 목표연도('14년)의 지역배출허용총량 준수를 위한 오염원별 배출량 저감방안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

다.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 저감대책

□ 저공해 자동차 보급

- 제작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
 - 가스·휘발유차는 미국수준('06년 ULEV, '10년 SULEV), 경유차는 유럽 수준('06년 EURO-4, '10년 EURO-5)으로 강화
-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
 - 자동차 제작사가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 자동차 보급 목표 제시
 - ※ '05년은 차종별로 1.3~12%로 설정,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
 - 저공해 자동차 구매시 보조금 지급 및 상용화 단계에서 세제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
- 제작차 배출가스 결함확인 검사제도 강화
 -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결함확인 검사 강화

□ 운행차 저공해화

○ 운행차 정밀검사 강화

- 정밀검사 대상 차량을 확대하고, 부하검사 대상을 대형차까지 확대
-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은 전문정비업소에서 정비를 받도록 하고, 배출가스 관련 부품 정비업체에 대한 인증제 도입

○ 경유자동차 관리 강화

-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(매연)을 지속적으로 강화
 - ※ 차종별로 대기환경보전법 현행기준에 비해 50~67% 강화
- 강화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추진

○ 자동차 연료의 품질기준 강화

- 휘발유·경유·LPG의 황함유량 등 품질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
예)경유 : 430ppm(현재) → 30ppm('06년) → 10ppm('10년)

□ 환경친화적인 교통수요 관리

○ 환경지역(Environmental Zone) 지정

-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환경지역으로 지정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의 통행 제한, 교통신호주기 조정 등 수요관리

○ 교통혼잡통행료 부과 확대

- 교통량 집중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통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교통혼잡통행료를 부과하여 자동차 통행 억제 유도

라. 사업장 관리대책

□ 대형 사업장 총량관리제

-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
 -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5년 단위로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유지하도록 엄격 관리
- 경제적 유인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 도입
 -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저감비용 최소화

□ 휘발성유기화합물 발생 저감

- 도료의 유기용제 함유 기준 강화
 - 도장 과정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(VOCs)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건축용·자동차용 도료의 유기용제 함량 제한
- 주유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회수하는 장치(Stage-II)를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주유소에 보급

□ 사업장에 대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

- 대기분야 전문가로 기술지원팀을 구성하여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 및 개선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 및 자문 실시
 -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진단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기술지원의 내실화 도모
- 탈황·탈질시설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
 -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·소사업장의 대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실시

마. 환경친화적 에너지 및 도시관리

□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및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

- 지역난방 및 구역형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
 - 개별난방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지역난방 보급가구를 지속적으로 확대('14년까지 90만호 추가 보급)
 - 상업 및 공공기관 난방시설의 10%를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으로 대체
- 환경친화적(에너지 절약형) 건물 보급 확대
 - 에너지와 자원절약 등을 통해 환경오염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법제화
 - '14년까지 공동주택·업무용 건축물 404개를 친환경 건축물로 지정

□ 환경친화적인 도시관리

- 바람통로를 활용한 대기오염 저감
 - 대기순환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람통로 형성이 필요한 지역은 녹지를 지정하거나 저층의 건물 배치 유도
- 대기오염상태와 장래 도시성장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도시형태를 마련하고 도시계획 수립시 반영

바. 소요재원 및 재원 확보방안

□ 재정투자 원칙

-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우선 추진하되,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분야에 한하여 재원 투자

- 제도개선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수용가능 수준을 넘어 경제적 부담을 받게 되는 계층에 대해 지원

예)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지원하되, 공공성(대중교통 및 화물 운송) 및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

○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강화된 기준 준수에 필요한 비용은 민간이 부담하도록 하고, 부담능력이 부족한 계층에 한해 지원

예)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·소사업장에 대기환경개선사업 지원

○ 재정투자에 대한 평가를 통해 투자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조정

- 매년 재원투자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및 범위 재조정(기본계획 수정)

□ 소요 재원

가. 총괄

○ 10년간 수도권대기환경개선사업에 4조 7,354억원 소요

- 국고 2조 3천억, 지방비 2조원, 민간 부담 4천억원

(단위 : 억원)

구분		계	무·저공해 자동차 보급	경유차 저공해화	사업장 관리	효율적관리 체계 구축
투자소요		47,354	821	42,824	3,111	598
국 고	보조	21,276	644	1,9272	762	598
	융자	2,258			2,258	
지방비		19,513	177	19,272	64	
민간부담		4307		4,280	27	

나. 주요 내용

- 공공기관 등에 하이브리드, 전기 이륜차 등 무·저공해 자동차 보급 : 국고 644억원
 - '08년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3,500대(484억원), 전기 이륜차 2,100대(12억원) 보급
 - ※ 성과평가를 토대로 '09년 이후의 보급계획 및 연료전지자동차(수소 충전소 포함) 보급계획 수립
 - '09년까지 마을버스, 운송화물 등의 경유차량 5,200대(148억원)를 저공해 자동차로 전환
 - ※ 성과평가를 토대로 '10년 이후의 보급계획 수립
- 운행중인 노후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, 저공해 (LPG) 엔진 개조 및 조기폐차 실시(비용 일부 민간부담 10만원~35만원) : 국고 1조 9,271억원
 - 중·대형 트럭과 버스에 매연 여과장치(DPF) 561,832대 부착(1조 3,289억원)
 - 소형 차량(RV, 소형 트럭)에 산화촉매장치(DOC) 235,550대 부착(985억원)
 - 저공해(LPG) 엔진 개조가 가능한 차량에 대하여는 산화촉매장치(DOC)에 우선하여 166,582대 엔진개조(3,406억원)
 -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개조가 어려운 208,157대 조기폐차(1,592억원)

○ 사업장 관리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

- 대형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비 융자(2,222억원), 중·소 사업장에 저녹스 버너 설치비 지원('07년까지 126억원) 등 사업장 관리 : 국고 3,021억원

※ 저녹스 버너는 성과평가를 토대로 '08년 이후의 보급계획 수립

- 외부 유입 오염물질 측정센터 설치(60억원), 기본계획의 성과 평가·보완을 위한 조사연구·홍보(330억원) 등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 : 국고 598억원

□ 재원확보 방안

- 중기 재정계획에 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 사업비 최대한 반영
 - '07년부터 교통세 중 일부를 대기환경개선 사업에 투자